

# 학부제의 이상과 현실

김 형 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 1. 학부제는 왜 실시해야 하는가?

**학**부제가 실시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우리나라는 이제껏 소위 학과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정책을 고수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형태를 부분적으로나마 고집하고 있는 학교가 여전히 있다. 학부제를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 가운데도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 학부제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큰 대신에, 교수들의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학부제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대학은 수준높은 전문지식을 소유한 지성인이면서, 건전한 의식과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대학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자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창조적 사고를 할 줄 알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오늘날 IMF 위기로 대표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육 기능을 대학이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순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없을 때, 대학은 그 존재가치를 스스로 상실하고 말 것이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연부존자원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에 속해 있을 때에는 스스로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보다는 지시에 충실하게 복종하고 명령받은 대로 실행하는 수단만을 강구할 줄 아는 인간이 더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암기 위주의 교육이 키워낸 인간도 이러한 순종형의 수동적 인간이었다면,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 학과제의 폐단을 반성해 보는 것은 '왜 학부제를 실시해야 하는지'를 검토해보는 좋은 첫걸음이다. 학과제는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를, 유사한 전공을 한 교수들로 구성된 학과로 고정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신의 전공을 미리 결정해서 그 학과에 입학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즉, 어떤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 무슨 학과에 입학하는 것이다. 한번 자신이 결정한 학과는 졸업 때까지, 아니 평생토록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젊음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젊은 나이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적성과 전공을 정확하게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학과제 아래에서 학생들이 엉뚱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했다. 어쩌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학생이 드물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더욱 정확한 표현일 정도로, 전공과 적성과의 괴리로 우리 학생들은 고민하고, 또 괴로워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 개개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학이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를 발생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학과 제도로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자신이 전공할 분야에 대한 사전정보를 먼저 취득하고, 과연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한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애착은 강할 수밖에 없고, 전공 선택을 후회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대학이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존중해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학부제'라는 명칭으로 총칭되는 '전공 자율선택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율권을 제고하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학생을 위한' 제도가 '학생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분명한 것이다. 학교를 운영하는 국가 또는 사립재단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교수들이 작성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교수들은 자신들이 고안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학문계발에 힘써야 하며,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최상의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자아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대학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이렇게 서로 역할을 잘 수행해나갈 때, 우리는 그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고 부른다.

학부제는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자율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교수들이 알찬 프로그램을 제시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학생 자신의 입장을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당국이나 교수들은 대단히 곤혹스러워 할 수 있다. 그러나 훌륭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실패하는 학교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성공할 수 없다. 지금처럼 학부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학생들이 대부분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입장에 서는 당연한 것이다. 학부제는 학생을 모집할 때부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줄 뿐만 아니라, 입학 후에도 자신의 전공에 관한 생각을 충분히 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단일 전공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전공, 복합전공, 연계전공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이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정착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만은 낯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우려가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우려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 2. 학부제는 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가?

학부제는 학생들에게 전공 자율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수들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월성을 학생들에 의해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의 고통을 최소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지만, 교수와 학교당국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은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로 구분되는 전공선택의 편중화 현상이다. 전공 편중 현상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교수, 학생, 행정직원 모두에게 심각한 것이다. 우선 과도한 학생이 몰리는 소위 ‘인기전공’에

소속된 교수들은 급격히 증가한 학생의 숫자를 감당할 만한 커리큘럼을 제대로 작성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수준높은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불평하기 마련이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좁은 공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성적이 공정하게 매겨진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 행정직원은 대형강의와 소형강의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제대로 된 행정 지원을 할 수 없고, 강의실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경비를 절감하려는 학교는 소수만이 듣는 강의는 폐강시키려고 하고, 이것은 교수들에게 ‘자신들의 강의를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전공분야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끝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것은 아닌가’와 같은 우려를 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성수기에 갑자기 많은 인파가 몰린 해수욕장이나 스키장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기가 힘든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수요 공급의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한 현상이 주기적으로 벌어진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은 장기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일이다.

정원이 자율화되어 있고, 대학간 경쟁이 자리잡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매년 선발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각 대학은 자신들이 선발할 수 있는 신입생의 숫자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된 통계에 따라서 자신들이 대략 원하는 신입생의 숫자에, 중복합격자 중 타대학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숫자를 더해서 입학허가서를 보낸다. 여러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들은 어느 대학의 프로그램이 가장 충실하

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느 대학의 동문회가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가, 어느 대학의 시설이 가장 좋은가 등에 따라서 지원 대학을 결정한다. 입학 후에 학교가 제공하는 전공 프로그램이 자신의 취향과 적성에 들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학생은 자유롭게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전공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졸업의 지연과 같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전공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더 큰 불이익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변경한다. 또 자신이 입학한 학교가 자신의 전공을 충분히 살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아예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학생이 전공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회의 인력수급과 학교 교육의 방향을 인위적이고 비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학과당 입학정원을 사전에 미리 고정시켜 놓고, 일정한 숫자의 학생을 모집한 다음, 졸업할 때까지 전과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일정기간 내에 졸업을 보장해주는 과거의 '학과별 정원 모집제'는 이제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으로서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학부제'로 총칭되는 '전공선택 자율화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가?

현재의 상태는 아직까지 학부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특히 교육제도의 경우에는, 개혁이 시작되고나서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조정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 대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두려워하여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무시하고 제도 자체를 용도 폐기해버리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정착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극복하려는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고 개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학부제가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불확실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학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면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일부 전공에 몰려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직업을 획득하는 데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전공을 선택하려는 의도가 집합적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소위 대학에서 '인기학과' 또는 '인기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인을 배출해내는 전공들이다. 예를 들면 법학, 공학, 경영학, 신문방송학, 의학, 행정학 등과 같이 전공 자체가 특정한 직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 학생들은 자연히 그러한 전공을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심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으며, 부모와 선배들이 그러한 전공을 선택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심지어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문헌정보학, 사회복지학, 신학 등과 같이 특정한 직업과 연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기학과'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영문학과 같이 직업과 연관을 짓는 것이 쉽게 연상되지 않지만 '인기학과'에 속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들

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이 직업과의 연계성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균형있는 인간 육성을 위해서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구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기학과에 있는 교수들은 “학생들이 너무 몰려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과 학점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인기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한탄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해서, 소규모의 클래스에 적합한 더욱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질적인 상승을 추구하고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반드시 많은 학생을 모아 놓고 가르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듯이, 소수의 학생이라도 제대로 학문후속세대로 키워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비록 사회의 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더라도 지성인의 교육에 적합한 전공은 그 나름대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제 아래에서 불안해하기 전에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부제와 같은 ‘전공선택 자율화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 특히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기득권을 상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고는 이 학부제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추가적 조치를 정착시킬 수 없다. 바로 이렇게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불필요하게 강

압적인 것들을 자율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결국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교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발적 협조를 얼마만큼 도출해 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학부제 성공 여부의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제 자체가 과거의 학과제보다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더욱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개혁하는 데 그만큼 더 큰 아픔이 따르지만, 현재의 이러한 혼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가 IMF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중에 더욱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여서 결국 파멸의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의 개혁 없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3. 학부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부제의 운명은 전공 편중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학부제 이전의 전공정원을 마치 신성불가침의 고정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 비록 과거의 전공정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대불변의 것이라고 주장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떤 전공의 적정인원이 얼마이어야 하는가처럼 결정하기 힘든 것은 없다. 대체로 적절한 전공인원을 측정해 보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 전공졸업자들

이 유사관련 분야로 취직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이다. 그러나 이것도 전공과 취업이 결정적으로 맞물려있고, 또 그러해야 하는 대학원과는 다르므로 애매모호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따라서 졸업생이 관련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그 학과의 정원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적정한 전공인원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최상의 방법은 그 전공인원을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전공인원은 공급자의 인위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전공이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는 교수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교육 공급자인 교수와 대학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전공인원을 결정하도록 맡겨두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지나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과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사이의 괴리가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대학으로부터 적절한 자양분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된 사회는 탄력을 잃게 되고, 사회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대학은 비효율적 낭비구조 속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셋째, 학생정원을 완전하게 자율화하는데 따르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면, 최소정원제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전공 영역별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인원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전공자율화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대학 입학생에게 대학이 제공하는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조치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전체 입학정원의 반은 전공에 관계없이 선발하고, 나머지 반은 단과대학별로 최소한의 정원을 배정하여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것은 졸업할 때까지 학생이 결정할 수 있는 전공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교수들에게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절충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의 선호도를 전혀 무시하는 대학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입학하기도 전에 자신의 전공을 결정해야지만 입학을 허가해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비효율적 낭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물건을 구입할 때, 내용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강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물품 구입 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과 전공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자신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질과 수준에 자신감이 있다면, 교육 프로그램의 완전공개화를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반드시 내용도 쉽고, 학점도 잘 받는 과목에 국한되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결국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내용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대학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애착과 책임을 느낌으로써 동기 부여가 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전공선택의 자율화와 다양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다.

다섯째, 전문가 양성교육에 적합한 전공은 학부전공 수준에서 전문대학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기학과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전문가 양성과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는 학과는 그 성격에 따라 과감하게 전문대학원으로 승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전문경영인, 전문기자, 전문사서, 전문변호사들이 부재한 이유는 사회제도상 그러한 전문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열악함에도 이유가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러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학부에서 문헌정보학, 신문방송학, 경영학, 법학 등을 60시간 이상씩 전공하도록 요구하면, 나중에 사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사회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것보다 사회학을 주로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과학도서관의 전문사서로 일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문헌정보학보다는 화학이나 물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혼과 관련한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것보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학부에서 철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전공한 학생이 경영대학원에 진학하여서 전문경영인으로 나설 때, 더욱 폭넓고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이러한 전문가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 수준에서 개설함으로써, 다른 기본 소양 및 학자양성 프로그램과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어느 것이 인기학과이고 어느 것이 비인기학과이고 하는 것은 학자양성, 시민양성, 전문가양성 어느 것에도 적절하

지 않은 것이다. 모든 전공이 다 같이 살게 되는 것은 각 전공의 특성에 맞도록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를 조정해주는 것이다. 편중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다.

여섯째, 대학의 기본 단위인 학과는 유사한 전공을 하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학과가 설립될 때의 기준은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을 가진 교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문제이지, 학생을 얼마나 모집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미국의 우수한 사립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하기 전에 저명한 교수를 먼저 확보하여서 학과를 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부 학생을 몇 명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교수의 신분보장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면, 학생에게 전공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교수의 신분보장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낳는다. 교수의 신분보장은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학생 모집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연구와 교육능력을 갖춘 선생은 많은 제자를 모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그러나 만약 전자를 갖추었는데도 후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수는 학교를 잘못 선택한 것이 된다. 뛰어난 연구와 교육능력을 갖춘 교수를 대우해주지 않는 대학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학생들의 전공선택 자율권 보장은 교수들의 신분보장권 확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제의 실현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착시키는 데 취해야 할 조치가 무

엇인지를 분석하고 난 후, 우리는 학생들에게 전공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학부제가 학생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는 것과 그것을 보장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학생은 좋은 선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선생은 학생을 잘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제도를 우리는 이상적으로 고안해내고, 현

실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

김형철/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윤리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철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철학연구소 소장과 철학과 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다. 한국철학회 국제교류이사를 맡고 있으며, 연구관심 분야는 규범윤리학(사회정의론, 공리주의, 자유주의), 응용윤리학(기업윤리, 의료윤리, 환경윤리, 직업윤리) 등이다. 저서는 『한국사회의 도덕개혁』이 있고, 역서는 『자유론』, 『이 모든 것의 철학적 의미는?』, 『합의 도덕론』, 『환경윤리학』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정보사회의 윤리”, “일의 공리주의” 외 다수가 있다.

## 대학 교육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3-3891, 780-7042  
팩스 : 780-8311)

###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